

#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1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8. 24.

발 의 자 : 서영석 · 인재근 · 양정숙  
최종윤 · 임종성 · 이해식  
김원이 · 이정문 · 박상혁  
노웅래 · 문진석 · 민병덕  
유기홍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,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임.

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은 3%로, 미국 59%, 영국 39%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록을 보이는데,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정책적 효과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,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이식 후 건강관리 미흡,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,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

고자 함(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, 제10조제2항제4호의2, 제31조 및 제32조, 제32조의2 신설 등).

##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홍보 및 홍보사업”을 “교육·홍보 및 교육·홍보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장기등기증자”를 “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”로, “지원정책”을 “예우 및 지원정책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 
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의 지원

제31조제2항제4호 중 “장기등기증자”를 “장기등기증자, 장기등기증자의 유족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3항 중 “국가”를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”로 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교류활동 지원)

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(기증자 본인이나

가족 또는 유족을 말한다)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, 범위 및 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(생 략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·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2.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<u>홍보 및 홍보사업</u> 에 대한 지원 3. <u>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</u> 의 마련 및 추진  4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교육·홍보 및 교육·홍보사업</u> ----- 3. <u>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</u> ----- <u>예우 및 지원정책</u> 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③ <u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</u>
제10조(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) ① (생 략)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0조(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

<p>1. ~ 4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5. (생 략) ③ (생 략) 제31조(비밀의 유지) ① (생 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 4.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<u>장기등기증자</u>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본인 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</p> <p>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) ①·② (생 략) ③ <u>국가</u>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④·⑤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의 지원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31조(비밀의 유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<u>장기등기증자</u>, <u>장기등 기증자의 유족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국가와 지방자치단체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 <u>제32조의2(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교류활</u></p>
---	--

동 지원) ① 국립장기이식관리  
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  
(기증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 
유족을 말한다)과 장기등을 이  
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 
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  
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 
선정기준, 범위 및 방법과 그밖  
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 
령으로 정한다.